

# 인천, 화학물질 누출 대응장비 부족

## 화학보호복 부족에 30%는 내구연한 초과 ... 6500만원 투입해 보충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등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에 관련장비가 부족해 사고발생 때 대응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구조 및 구급장비 보유 기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대응 장비는 화학보호복, 방사선보호복, 방독마스크 등 31가지이다.

장비 종류마다 보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인천시 소방안전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숫자나 내구연한이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 구조대원은 184명으로, 1명당 화학보호복 1벌을 가져야 하지만 현재 173벌만 보급됐으며, 30%인 60여벌은 내구연한 5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보호복은 특수구조단 31명 전원이 1벌씩 보유하게 돼 있으나 25벌만 보급됐으며, 184개 확보돼야 하는 방독마스크와 화생방마스크도 실제 보유량이 각 12개와 34개에 불과했다.

제독제는 27대가 기준인데 13대에 불과하고 오염환자운반상도 45대 기준에 12대만 갖추었으며, 중화제살포기는 9대 기준에 7대, 오일펜스는 18대 기준에 14대로 모두 기준치에 미달했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방재청의 장비 기준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있다며 현재 보유장비로 사고 대응에 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스크와 기능이 같지만 성능은 뛰어난 공기호흡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사실상 쓰이지 않으며, 공기호흡기는 구조대원 전원에게 지급됐다.

구조대원이 3교대 근무를 서기 때문에 장비가 교대근무 인원 숫자만큼만 있으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는 현실에 맞게 장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만간 장비 기준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중소형 사고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교대근무 인력 뿐만 아니라 전원이 출동해야 하는 대형사고 발생 때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는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개정기준에 맞게 장비를 보충할 계획이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04>